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 보고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총괄편)

2000.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 목 차 >

### I.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

1. 세계무역에서의 지역경제권의 비중확대
2.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변화
3. 한국의 입장

### II.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

1. 최근 한일관계의 변화와 한일 FTA 연구의 의의
2.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3. 한일 수출입구조
4.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 III.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정태적 분석
  - 가. 관세철폐 효과
  - 나.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 다.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효과
2. 동태적 효과
  - 가. 투자효과
  - 나. 생산성 증대에 따른 동태적 효과

### IV. 한·일 FTA의 정책방향

1. 한국의 기본입장
2. 한·일 FTA의 혜택강화 방안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 I.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

## 1. 세계무역에서의 지역경제권의 비중확대

-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o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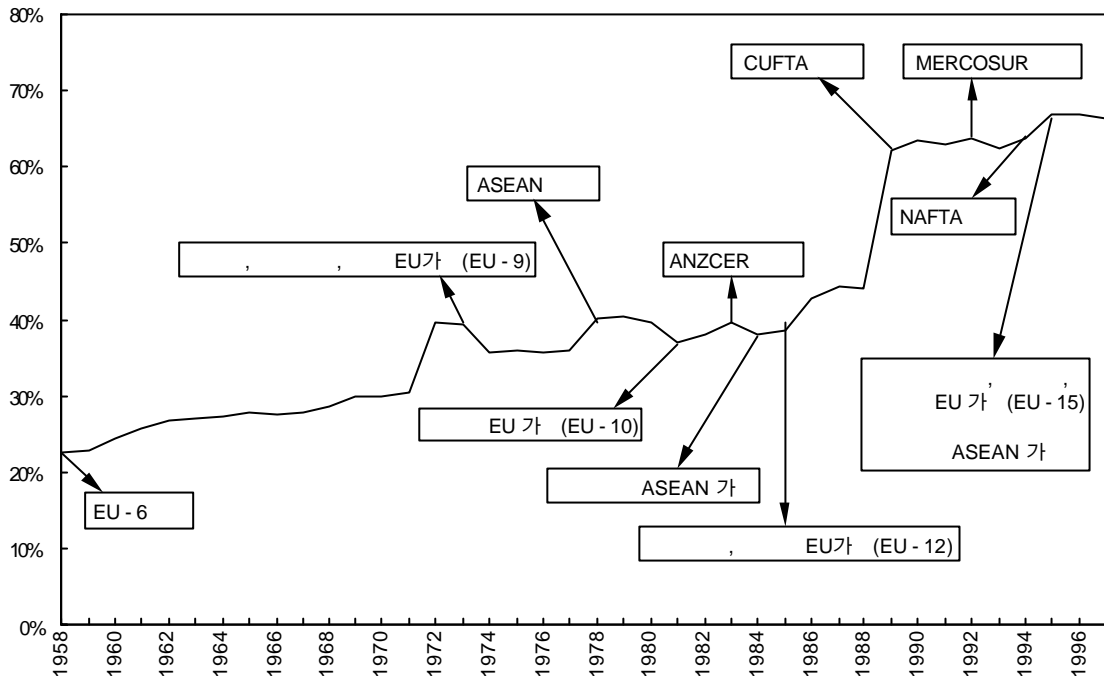
< 표-1>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구 분	1948 ~ 1954	1955 ~ 1959	1960 ~ 1964	1965 ~ 1969	1970 ~ 1974	1975 ~ 1979	1980 ~ 1984	1985 ~ 1989	1990 ~ 1994	1995 ~ 1999,10
통 보 건 수	2	3	12	9	21	19	6	5	47	85
누 계	2	5	17	26	47	66	72	77	124	209

자료: WTO, Secretariat

- o 세계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주의의 확산은 주요 지역경제권의 세계교역상의 비중 증가와 함께 域內(intra-regional)무역과 域間(inter-regional)무역의 급증을 동반하고 있음.
- o 域內무역과 域間무역의 증가로 세계교역에 있어 지역경제권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림-1> 세계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의 비중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2>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地域內貿易 집중도 지수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E U	1.35	1.57	1.47	1.60	1.61	1.53
NAFTA	1.92	1.88	2.10	2.29	2.30	2.27
ASEAN	4.38	4.98	3.80	3.09	3.10	3.22
MERCOSUR	3.29	3.59	7.48	9.15	9.69	9.37
ANZCER	4.58	4.56	5.35	6.59	6.39	6.64

주: 지역내 무역집중도 = 지역무역협정의 역내 무역 비중/지역무역협정의 세계 교역 비중.  
 따라서 지역내 무역집중도 지수는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내 무역이 對세계와의 교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1에 접근하게 되고, 對세계교역에 비해 역내교역이 심화되면 지수가 1보다 크게됨.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2.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변화

- 과거 FTA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stumbling block)로 인식되었음.
  - o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 출범, FTAA 구상 등 親지역주의로 전환하였음.
- WTO와 OECD는 세계경제에 있어 GATT/WTO와 함께 실질적으로 수많은 FTA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공식보고서를 통해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에 대한 디딤돌(building block)로 평가함.

## 3. 한국의 입장

- FTA의 체결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동이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역내국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됨. 또한 FTA체결국간의 공동보조와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WTO, OECD, APEC, IMF 등 주요 통상관련 국제기구에서 협상력 증대와 국익확대가 가능함.
  - o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있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FTA를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많은 혜택을 함유할 수 있을 것임.
- 세계 주요교역국 가운데 지역경제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및 홍콩뿐임.
  - o FTA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개방확대를 통한 경제구조의 선진화,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확대, 통상마찰의 사전적 해소 등을 제공함.
  - o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바, 한

국은 이미 칠레와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을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크고 시장규모도 방대한 거대경제권을 선택할 때 FTA의 혜택이 가장 클 것임.

<표-3> 세계 주요국의 GDP와 가맹 자유무역협정

순 위	국 명	G D P (억달러)	가맹 자유무역협정	
			세계비중	
1	미 국	73,419	25.7%	NAFTA
2	일 본	45,997	16.1%	
3	독 일	23,532	8.2%	EU
4	프 랑 스	15,401	5.4%	EU
5	이 탈 리 아	12,077	4.2%	EU
6	영 국	11,458	4.0%	EU
7	중 국	8,154	2.9%	
8	브 라 질	7,489	2.6%	MERCOSUR
9	스 페 인	5,816	2.0%	EU
10	캐 나 다	5,793	2.0%	NAFTA
11	한 국	4,848	1.7%	
12	러 시 아	4,406	1.5%	CIS경제동맹
13	호 주	3,925	1.4%	ANZCER
14	네 덜 란 드	3,924	1.4%	EU
15	인 도	3,560	1.2%	SAPTA
16	멕 시 코	3,348	1.2%	NAFTA
17	아르헨티나	2,947	1.0%	MERCOSUR
18	스 위 스	2,934	1.0%	EFTA
19	대 만	2,723	1.0%	
20	벨 기 에	2,644	0.9%	EU
21	스 웨 덴	2,502	0.9%	EU
22	오스트리아	2,261	0.8%	EU
23	인도네시아	2,258	0.8%	AFTA
24	태 국	1,850	0.6%	AFTA
25	터 키	1,815	0.6%	對EU연합협정, 對EFTA 자유무역협정
26	덴 마 크	1,742	0.6%	EU
27	노 르 웨 이	1,578	0.6%	EFTA
28	홍 콩	1,548	0.6%	
29	폴 란 드	1,345	0.5%	CERTA
30	남 아 공	1,263	0.4%	SADC
	소 계	262,558	91.9%	
	세 계	285,837	100.0%	

주: 1996년 기준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수출·수입 대상국으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우선적 FTA 검토 대상국가임.
  -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분야의 부담으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WTO 미가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따라 1998년 10월 한·일 통상장관회의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함.
- 한·일은 「21세기 한일경제관계연구회」를 구성하여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은 아시아경제연구소(アジ経, IDE)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함.

## II.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

### 1. 최근 한일관계의 변화와 한일 FTA 연구의 의의

- 한일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후 1998년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게이조일본총리의 「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행동계획」이 나오기까지 양국간의 교류는 기대에 크게 미흡하였음.
  - o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초기단계에 있던 한국경제에는 일본의 자본 및 기술 유입, 그리고 일본에게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함.
  - o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대일 의존도에 따른 만성적 대일무역적자와 함께 수입선다변화제도, 독도문제, 과거사문제, 일본문화수입 불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양국간의 완전한 교류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옴.
- 최근에 와서 연쇄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가져온 양국간 우호적인 정치외교관계는 21세기에 양국간의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함.
- 1998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99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채택한 바 있음.
  - o 이에 따라 한·일간에는 쌍무적 투자협정(BIT), 표준·인증에 있어서의 상호 인정협정(MRA)와 함께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Agenda 21)이 추진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음.
- 경제협력 제고방안과 더불어 現 정권 출범 이후 단행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및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으로 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 할 수 있음.



## 2.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 가. 교역비중 및 규모의 감소

- 일본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위의 수입대상국인 동시에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수출대상국임. 한편 한국은 일본의 제 4위 수출시장이며 제 3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양국은 서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
-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 중 일본과의 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한일국교정상화 직후인 65년에 33.2%에 달하던 것이 90년 23.2%, 97년 15.2%, 그리고 98년에는 12.9%까지 감소하였으나, 99년에 15.2%를 기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음.

<표-4> 對일본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달러, %)

년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80	3,039	17.4	5,858	26.6	- 2,819
1985	4,546	15.0	7,557	24.3	- 3,011
1990	12,638	19.4	18,574	26.6	- 5,936
1995	17,088	13.6	32,597	24.1	-15,509
1996	16,002	12.3	31,396	20.9	-15,394
1997	14,771	10.9	27,907	19.3	-13,136
1998	12,238	9.3	16,840	18.1	- 4,602
1999	15,862	11.0	24,142	20.2	- 8,280

자료: 1980~1998년은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호. 1999년은 KOTIS.

- o 일본의 대외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일시적으로 4.1%를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정체되어 있음(1997년 5.4%, 1999년 5.4%).
- 한편,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로 인해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 이어 일본의 주요한 무역흑자 대상국임.

- 1965~1999년의 기간동안 대일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에 무역수지적자폭이 40억불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된 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5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에 46억불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1999년에 83억불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나. 직접투자의 부진

- 한일 양국간의 직접투자는 양국간의 교역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1994~95년 중에 최고조에 달하다 이후 감소세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년에 34.8%로 정점을 이룬 후 큰 폭의 감소세가 계속되어, 97년 이후에는 7.6%~8.0%에 머물고 있음. 한편 전통적으로 미미했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중 일본의 비중은 95년 3.4%로 최고치를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 내외에 머물고 있음. 누계면에서도 일본의 對韓직접투자(1951~1998년간)는 일본 총 해외직접투자의 1.0%, 한국의 對日직접투자(1962-1998년간)는 한국 총 해외직접투자의 1.8%에 불과함.
- 2000년 1~4월중 일본의 對韓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대비 82.1% 증가한 3.4억달러이며 비중도 6.5%에서 9.0%로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전통적인 주요투자국인 EU(-61.2%)와 미국(-8.9%)은 전년동기대비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5> 한·일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의 對日투자 <sup>1)</sup> (비중)	28 (2.3)	6 (0.5)	57 (2.5)	105 (3.4)	81 (1.9)	64 (2.0)	23 (0.6)	48 (1.9)
일본의 對韓투자 <sup>2)</sup> (비중)	174 (21.6)	157 (22.2)	345 (34.8)	337 (24.8)	279 (12.1)	235 (7.6)	414 (8.0)	806 (7.8)

주: 1) 투자기준, 2) 도착기준.

자료: 1992~1998년은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9년 1월.

1999년 對日투자는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동향」, 1999년 12월.

1999년 對韓투자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동향」, 2000년 1월.

#### 다. 중간재의 과도한 對日수입의존 심화

- 한국은 많은 산업분야에 있어 일본으로부터 부품, 중간재 및 사업장비를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심하며, 이는 또한 對日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8년 중 우리나라의 對日 수입을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중간재가 8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재는 17.7%, 자본재는 9.0%, 소비재는 8.7%에 불과함.
  - o 한일 양국간에는 기술격차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분업과 공정간 분업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정간 분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생산제품을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형태의 분업패턴을 보이고 있음.

#### 라. 기술도입의 감소

- 한국의 對日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9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임(96년 7.2억달러, 97년 5.5억달러, 98년 5.9억달러, 99년 1~10월중 4.1억달러). 반면, 한국의 對美 기술도입은 1998년에 일시 감소한 후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97년 14.7억달러, 98년 13.3억달

러, 99년 1~10월중 13.9억달러). 누계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총기술료지급액의 52.7%, 일본은 28.2%를 차지함.

- 1997년의 경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총첨단기술도입의 52.6%(91건)를 수입한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17.9%(31건)만을 도입하였음.

### 3. 한일 수출입구조

- 1965-1995년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대일교역구조의 변화를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광산물(41.03%)과 농산물(12.82%)등 1차 산업이 대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28.21%)이 수출의 1/3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섬유가 5.31%를 차지함. 반면 중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5%이하로 상당히 저조하였음.
- 반면 대일 수입의 경우, 동 기간동안 제조업이 95%(중공업 75%, 경공업 2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 보완적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기계(22.78%), 화학제품(20.25%), 섬유(17.09%) 및 철강(14.56%)등의 중화학 산업이 대일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1970년대 초반부터 농산물, 광산물 및 식료품의 대일 수출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광산물, 식료품의 경우 각각 -4.81%, -16.35%, -10.1% 감소) 그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1995년에는 1차 산업의 대일수출비중이 전체산업의 5% 미만에 불과하게 됨.
- 그러나 제조업의 대일 수출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1995년에는 대일 수출의 약 95%이상을 차지하게 됨.

- 특히 기계와 철강 및 기타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 각각 27.06%, 11.09%와 5.23%를 차지하게 됨.
- 섬유, 의복, 가죽제품 등 경공업 제품의 경우에는 1970-1980년의 기간동안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로 1/3 이하로 감소함.
- 한편, 1970년대 이후 대일 수입에 있어서 1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 전체산업의 1% 미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경공업 제품의 수입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1965년의 20%에서 1995년에는 5% 미만에 불과하게 됨.
- 반면 중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특히 기계의 경우 1965년 22.8%에서 1995년에는 55.8%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전기·전자제품의 수입비중도 3.16%에서 17.4%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1990년 중반에 다시 4.13%로 급격히 감소함.
- 요약하면,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과 수입 양 분야에서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화학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이는 한일간 무역구조가 과거의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6> 한국의 대일 수출산업별 비중변화 추이

산업 \ 년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농산물	12.82%	4.81%	2.98%	3.38%	3.57%	2.51%	2.39%
축산물	0.00%	16.83%	2.34%	1.63%	0.60%	0.03%	0.05%
임산물	0.00%	0.00%	0.00%	0.00%	0.00%	0.01%	0.00%
수산물	2.56%	0.96%	2.13%	1.71%	1.12%	0.59%	0.54%
광산물	41.03%	16.35%	4.69%	2.59%	1.15%	1.07%	0.51%
식료품	28.21%	10.10%	13.95%	7.89%	6.17%	9.47%	7.80%
음료품 및 담배	0.00%	0.00%	0.11%	1.00%	0.07%	0.10%	0.23%
섬유	5.13%	3.85%	3.09%	5.64%	2.62%	2.24%	3.82%
의복	2.56%	21.63%	19.49%	16.37%	14.11%	15.20%	10.47%
가죽제품	0.00%	0.48%	4.69%	6.35%	4.60%	9.90%	5.26%
목제품	0.00%	5.77%	4.05%	2.01%	0.90%	1.10%	0.85%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0.00%	0.48%	1.49%	0.79%	0.25%	0.30%	0.45%
석유정제 및 석탄제품	0.00%	1.44%	4.26%	0.04%	9.82%	2.61%	4.02%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0.00%	2.40%	6.28%	10.90%	12.12%	8.18%	7.90%
비금속광물제품	0.00%	0.00%	2.45%	2.72%	3.67%	2.96%	1.53%
철강	2.56%	2.40%	1.70%	12.66%	11.34%	11.40%	11.09%
비철금속	0.00%	1.44%	0.43%	1.42%	0.47%	0.84%	0.94%
금속제품	2.56%	0.48%	1.92%	1.50%	0.97%	2.39%	2.53%
자동차	0.00%	0.00%	0.11%	0.08%	0.12%	0.31%	0.42%
수송기계	0.00%	1.92%	0.75%	1.09%	8.44%	1.32%	0.43%
전기·전자제품	0.00%	1.44%	8.52%	6.14%	5.82%	14.32%	6.47%
기계	0.00%	2.88%	8.73%	9.11%	7.54%	7.85%	27.06%
기타 제조업	2.56%	4.33%	5.86%	4.97%	4.50%	5.31%	5.23%
총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GTAP 1995.

<표-7> 한국의 대일 수입산업별 비중변화 추이

산업 \ 년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농산물	2.53%	13.20%	0.13%	1.66%	0.12%	0.11%	0.08%
축산물	0.00%	0.11%	0.13%	0.11%	0.08%	0.07%	0.05%
임산물	0.63%	0.23%	0.13%	0.09%	0.10%	0.03%	0.01%
수산물	0.00%	0.00%	0.04%	0.05%	0.11%	0.07%	0.05%
광산물	1.27%	0.80%	1.13%	2.03%	0.75%	0.45%	0.44%
식료품	0.63%	1.03%	0.55%	0.37%	0.38%	0.29%	0.34%
음료품 및 담배	0.00%	0.00%	0.00%	0.02%	0.05%	0.07%	0.44%
섬유	17.09%	16.88%	9.10%	4.61%	3.97%	2.78%	2.26%
의복	0.00%	0.00%	0.13%	0.04%	0.10%	0.13%	0.17%
가죽제품	0.00%	0.00%	0.08%	0.07%	0.14%	0.12%	0.18%
목제품	0.00%	0.11%	0.04%	0.27%	0.08%	0.39%	0.17%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1.27%	1.26%	1.01%	0.86%	1.02%	0.90%	0.72%
석유정제 및 석탄제품	1.90%	0.80%	1.01%	1.18%	0.71%	1.74%	2.40%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20.25%	11.25%	20.89%	16.98%	15.68%	15.50%	14.67%
비금속광물제품	0.63%	0.80%	1.22%	1.73%	2.28%	1.94%	1.99%
철강	14.56%	9.76%	13.34%	15.21%	11.71%	7.86%	7.72%
비철금속	2.53%	1.03%	1.93%	2.01%	1.41%	1.63%	2.05%
금속제품	3.80%	2.53%	2.35%	2.12%	2.27%	1.93%	1.41%
자동차	1.90%	4.36%	3.31%	1.89%	2.47%	2.38%	2.27%
수송기계	3.16%	6.89%	7.63%	3.69%	3.44%	0.58%	0.79%
전기·전자제품	3.16%	2.64%	5.91%	7.71%	11.30%	17.38%	4.13%
기계	22.78%	25.03%	27.31%	34.11%	38.03%	40.57%	55.77%
기타 제조업	1.90%	1.26%	2.64%	3.21%	3.81%	3.08%	1.91%
총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GTAP 1995.

- 1995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입 구조를 비교분석한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출구조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유사성이 클 뿐 아니라 일본과의 수출경합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국간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은 대다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기계류·화학품·식물중 일부품목 등으로서 이들 품목이 총수출(우리나라와 일본이외 지역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 67%, 일본의 경우에는 약 58%임.

- 둘째, 수입구조면에서는 우리경제의 수입의존도(명목GDP에 대한 상품수입 비율 기준)가 1997년 이후 29% 수준을 나타내어 일본의 7%내외보다 크게 높았음.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철강, 기계류 등의 수입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국별 수입비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비중이 20% 수준으로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대일본 수출비중보다도 거의 2배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우리경제의 대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4.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 한국의 對일본 평균실행관세율은 7.9%이고 일본의 對한국관세율은 2.9%임 (1995년 GTAP 통계 Version 4).
- 23개 주요 산업분류별로 한일간의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정점관세 (tariff peak) - 관세율이 15% 이상이거나 또는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 - 구조가 서로 비슷한 편임.



<표-8> 산업별 관세율구조

산 업	한국의 對日 실행관세율	일본의 對韓 실행관세율
농산물	6.80%	4.82%
축산물	5.15%	0.16%
임산물	1.56%	0.01%
수산물	10.12%	6.57%
광산물	3.27%	0.01%
식료품	14.76%	13.89%
음료품 및 담배	38.43%	15.05%
섬유	7.92%	2.94%
의복	8.00%	5.77%
가죽제품	5.54%	8.36%
목제품	7.70%	0.01%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6.41%	0.46%
석유정제 및 석탄제품	4.76%	0.12%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7.81%	1.77%
비금속광물제품	7.29%	1.42%
철강	7.52%	1.59%
비철금속	6.74%	0.00%
금속제품	7.99%	0.13%
자동차	8.42%	1.20%
수송기계	7.78%	1.20%
전기·전자제품	8.00%	0.80%
기계	8.03%	0.00%
기타 제조업	7.86%	0.34%

자료: GTAP 1995.

- 한국의 대일 관세율은 대부분 산업에 있어 관세율이 6~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수산물, 식료품, 음료품 및 담배산업에 각각 10.1%, 14.8%, 38.4%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한편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인 6.8%를 채택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식료품, 음료품 및 담배, 의복 가죽제품 및 농산물, 수산물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한국의 對일본 관세율 7.9%는 일본의 對한국 관세율 29% 보다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국간 FTA의 경우 관세철폐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욱 유리할 것임.
- 한편, 일본의 비관세장벽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제도적 장벽과 이행상의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o 법제도에 의한 장벽: 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가격제한, 정부조달상의 제한, 기술장벽, 투자장벽 등
  - o 법제도가 아닌 이행상의 장벽: 배타적 상관행, 일부의 기술장벽 등

<표-9> 분야별 비관세 장벽

분야별 비관세 장벽	내용
수량제한	수입할당: 99년도 현재 HS 4단위기준으로 67개 비자유화품목에 대하여 지정 관세할당: 99년도 현재 HS 4단위기준으로 38개 품목에 대하여 지정
수입절차상의 제한	사전확인: 99년도 현재 HS 4단위 기준으로 58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通産省 大臣의 사전확인 필요
	특별승인 99년도 현재 원산지, 선적장소 등에 따라 HS 4단위 기준 68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통산성 대신의 승인 필요
	수입창구제한: 입담배, 소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창구 제한
가격제한	기준수입가격제도: 99년도 현재 HS 4단위 기준 5개 품목 지정
	관세율 특별가산제도: 현재 HS 4단위 기준으로 26개 품목 지정
	특별긴급관세제도: 현재 HS 4단위 기준으로 24개 품목 지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실제 제소 실적 미미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 및 부과(반덤핑 1건)
기술장벽	강제적 기술규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개 민간운영규정: 일본공업규격(JIS), 일본농업규격(JAS), S마크, G마크 등
투자장벽	특정 핵심산업분야(항공기, 핵발전, 군수 등)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제한 및 법률, 은행, 증권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는 지점설치 제한

자료: 한국무역협회, 1999.

### Ⅲ.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일 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17.8%를 차지하며 (일본 16.1%, 한국 1.7%) 인구규모로는 약 1억 7천만명 정도로 세계의 3.0% (일본 1억 2,535만명, 한국 4,555만명)를 차지하게 됨.
  - o 한·일 경제는 GDP가 약 5조 달러로 NAFTA GDP (미국 25.7%, 캐나다 2.0%, 멕시코 1.2%)의 62% 수준이 되는 한편, 미국 GDP의 약 70%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게 됨.
- 한·일 양국의 교역규모는 세계교역의 9.8%(일본 7.0%, 한국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교역규모의 약 3/4에 해당되는 것임.
- 한편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1/10, 교역규모는 일본의 약 40%에 불과함.

#### 1. 정태적 분석

##### 가. 관세철폐 효과

- 관세철폐에 따른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함.
  - o CGE모형은 일반균형모형으로 부분균형모형이 갖지 못하는 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르는 자원재배치효과를 포괄하는 장점이 있음.
  - o 그러나 CGE모형은 기본적으로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을 가정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함께 투자확대, 노동력증대 등의 동태적 변화와 경쟁심화에 따르는 생산성증대효과 등 대부분의 동태적 효과가 누락되는 한계가 있음.

- 관세철폐에 따른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로, 관세철폐에 따른 산업별 생산 효과를 보면 한국은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의 제1차 산업과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경공업제품과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생산이 증가하고 다른 산업들(즉, 광산물, 음료 및 담배, 목재·펄프, 종이·인쇄, 화학제품, 철강, 금속제품, 수송장비, 전기·전자, 기계, 기타제조업)에서는 생산이 감소됨.
  - o 그러나 생산증가의 경우 의복과 피혁제품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폭이 연간 1.0%이므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산 감소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중화학산업에 있어서 연간 1.0~2.0%의 생산감소가 예상됨.
- 둘째로, 관세철폐에 따라 한·일 FTA로 한국은 농축산물, 수산물의 제1차 산업과 식료품, 의복, 가죽제품의 경공업 분야에 있어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o 따라서 일본과의 FTA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화학 산업분야에 있어 산업내(intra-industry)교역 확대가 중요함. 즉, 양국이 모두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치열히 경쟁하는 이들 산업에 있어 공정분업 및 제품차별화를 통한 산업내교역의 확대가 중요함.
  - o 무역수지의 경우, 가공식품, 의류, 피혁 및 서비스 부문에서 무역흑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화공과 기계장비에서의 무역적자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10>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의 생산 및 무역수지 변화

(+: 증가, -: 감소)

구 분	생산	대일 무역수지
농산물	+	+
가공식품	++	++
임산물	+	-
수산물	+	+
광물자원	-	-
비철금속	--	--
음료 및 담배	-	--
섬유	+	--
의류	+++	++
피혁제품	+++	++
목재·펄프	-	-
종이·인쇄	-	-
화학	-	----
철강	--	--
금속제품	--	--
자동차	+	--
수송 기계	--	--
전기·전자	-	--
기계장비	--	----
기타제조업	--	--
서비스	+	++

주: 1) 생산의 +/-는 연간 생산증감이 1.0%이내, +/---는 1.0%~3.0% 사이, +++는 3.0% 이상임.

2) 對日무역수지의 +/-는 對日무역수지가 1억 미만, +/---는 1억-10억 사이, ---는 10억 이상을 나타냄.

- 셋째로, 한·일 FTA는 한국의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각각 0.07% 및 0.19% 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o 이러한 실질 GDP 변화와 후생수준의 변화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각각 3.4억달러 및 7.7억달러에 불과함. 따라서 정태적 분석에 의한 한일FTA의 관세 철폐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하겠음.

- 한편 대일본 무역수지의 경우 60.9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나 제3국과의 무역수지변동을 포함한 대세계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악화에 그침.
- o 對일본 무역적자의 확대는 FTA에 따른 양국간의 교역규모의 확대로 비탄력적인 대일수입구조를 가진 한국의 대일수입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수입선이 제3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이전되는 무역전환도 발생함을 의미함.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평균관세율을 철폐함으로써 한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악화되기 때문임.

<표-11> CGE에 따른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단위: 억달러)

경제변수 \ 국가		한 국	일 본
후생수준(%)		-0.19	0.14
등가변환		-7.66	62.32
실질 GDP (%)		-0.07	0.04
수출변동(%) <sup>1)</sup>		2.32	0.50
수입변동(%) <sup>1)</sup>		3.40	1.09
무역수지	對일본/對한국	-60.90	60.90
	對제3국	45.56	-68.46
	對세계	-15.43	-7.56

주: 1) 물량기준

2) 등가변환은 후생수준의 변화를 GDP상당치로 환산한 것임.

3) 1995년 한국의 GDP는 4,894억달러임.

## 나.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은 다자무역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관세인하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로 집중되고 있음.

- 특히, 그간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비용이 관세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비관세장벽이 무역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이를 정확히 찾아내거나, 이를 계량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한일간에는 서로가 많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가 인식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느 것이 비관세장벽인가를 적시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기존의 무역환경에 익숙하여 비관세장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더라도 유통구조, 상관행 등에 내포되어 있어 별도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임.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로 EC의 경우 역내교역액의 1.6~1.7%의 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Cecchini 보고서(1988)에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UNCTAD(1994)는 통관절차 및 관련활동에 대한 비용이 총교역액의 7~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역내국간의 조화로 동 비용의 1/4 수준인 1.75~2.50%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1995년을 기준으로 양국간 FTA 체결에 따라 절감될 수 있는 통관절차 비용은 한국의 경우 약 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표준·인증에 있어서는 WTO TBT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각국이 자국의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
  - 美 상무성(1998) 및 EU집행위에 의하면 기술 규제관련 대상품목이 총수출액의 25%, 이로 인한 수출감소는 기술규제 대상수출액의 15%~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즉 표준·인증관련 기술규제로 총수출액의 3.75~6.25%의 수출이 감소함.

- 따라서 한일간의 표준·인증의 조화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최소값인 3.75%를 적용할 경우 약 6.1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근래 정부조달과 관련된 FTA 추진효과를 수치화한 연구는 없으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 가입에 따른 정부조달시장 개방효과를 볼 수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WTO GPA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장잠식효과보다는 해외진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한·일에 있어서는 21억달러의 시장개방이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한편, 반덤핑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반덤핑제도의 활용은 국내산업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반덤핑제소로 인한 수출저해라는 부정적 요인도 볼 수 있음.
  - 1987년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반덤핑 조치가 부과된 24개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효과는 총 6억달러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2.2억 달러의 수입억제효과가 있었음.
-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여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산할 수 있는 분야와 수치의 신뢰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표-12>과 같이 한·일 FTA로 4.6억달러의 비용절감과 6.1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발생함.

<표-12> 비관세장벽 철폐효과

(단위: 억달러)

구 분	한·일 FTA 효과
통 관 절 차	4.6
표준·인증	6.1
계	10.7



주: 1) 1995년 기준임.

2) 통관절차는 비용절감 효과이며 표준·인증은 수출증대 효과임.

- 이 밖에도 계량적 측정은 불가능하나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혜택으로 인해 양국의 후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양국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연계 및 조화로 양국의 통관당국, 은행 및 운송회사간의 전산망이 통합되는 경우, 양국간 무역에 있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통합된 EDI를 향후 양국간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통합체제구축과 연계시킴으로서 막대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표준·인증의 조화를 통한 수출증대 혜택이외에도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상대국으로부터 시험,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임. 이와 함께 양국간의 시험, 검사 및 인증체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동 분야의 시장확대도 예상됨.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공동등록소 또는 공동이행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체계가 통일되어 한·일 기업들간의 Patent Pool(공동특허) 및 Cross-licensing(교차허여)등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 다.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효과

- 한·일 FTA를 통하여 서비스시장을 기존의 WTO 양허수준을 넘어 더욱 확대 개방하는, 즉 WTO Plus의 시장개방의 경우 건설서비스에 있어 약 9.2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됨.
  - 일본의 건설시장 규모는 건설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약 5천6백억달러(1998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3백9십4억달러)의 약 10배가 넘는 규모임.

- 한·일 FTA의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개방확대와 국경간 노동인력이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대국 건설시장에서 0.1~ 0.2%의 점유율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o 한국 건설업체의 경우 특히 시공부문의 진출확대로 일본의 건설시장규모의 2%인 총 10억달러의 수출확대가 전망됨. 이와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8,000만달러 증가할 것임.
  - o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인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 국경간 노동인력의 이동이 수반되어야 함.
- 유통 서비스의 경우는 한·일 FTA 체결로 일본에서의 유통망의 확대, 일본의 선진마케팅 기법 습득, 우리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그에 따른 수출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o 특히 일본의 시장진출에 있어 유통경로상의 독특성이 진입장벽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한·일 FTA의 체결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과 상품이 까다로운 일본 유통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투자상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양국간 자본이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특히 국내외 금리차이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 차이를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 형태의 자본이동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o 금융서비스의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금융서비스부문의 투자와 서비스 무역이 활성화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통신부문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 분야에 대해, 기본통신망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제한 등 외국인 투자를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체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유인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투자는 부분적인 지분투자에 그쳤지만 FTA가 체결되어 계약체결 대상국들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경영권의 획득과 같은 기존의 유인보다는 높은 유인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해운 서비스의 경우 제3국 선사들의 덤핑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확대형 FTA를 체결하면 시장점유율 하락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시장운임이 다소 회복됨으로써 채산성의 호전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관광서비스에 있어서도 한·일 FTA 체결을 토대로 비자폐지를 포함하여 양국 간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일 항공노선이 증설되며 관광서비스 및 시설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시장개방 확대가 추계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면 <표-13>과 같음.

<표-13> 서비스 시장개방 효과

(단위: 억달러)

구 분	한·일 FTA 효과
건설서비스	9.2

- 이와 같이 WTO Plus 형태의 추가적 서비스시장개방은 한일FTA시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욱 유리할 것임. 특히 서비스교역 활성화 수단으로 국경간 노동력 이동과 광범위한 상업적 주재권(commercial presence)에 따른 국경간 자본 이동은 양국 FTA의 혜택을 크게 확산시킬 것임.

## 2. 동태적 효과

### 가. 투자효과

- FTA는 역내외 기업들이 체약국간 관세철폐에 따라 역내 시장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규 투자를 늘리거나 또는 특혜 원산지규정에 따라 기존 역외국에 소재한 생산기지를 역내국으로 이전시키는 투자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o 또한 NAFTA와 같이 기존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다루는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및 분쟁해결장치 등의 투자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는 기존의 자유화정책을 국제협정으로 구속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의 기대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짐.
  - o 장기적으로는 FTA에 의해 회원국들의 시장이 합쳐져서 경쟁이 제고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임.
- 실제 NAFTA 체결 전후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추이를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 체결 이전인 1990년대초에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 체결전후인 1993년에서 1995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 o 멕시코에 인접한 미국기업들의 경우 멕시코 정부가 1980년대 말부터 이미 외국인투자제도를 자유화함에 따라 이 시기에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o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은 NAFTA로 인해 기존의 자유화 조치가 구속화되어 멕시코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역내 무역자유화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NAFTA 체결을 전후하여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임.
- 한·일 FTA의 경우 현재 일본의 관세율 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이므로, FTA의 체결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관세장벽의 감소보다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른 투자환경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제고에 따른 효과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추정됨.

- 이 경우 한·일 FTA가 투자에 미칠 효과는 기존 BIT의 투자효과에 대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기존 BIT를 체결한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투자유입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중 BIT 또는 FTA와 관계된 요소로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도, 투명성 등을 들 수 있음.
  - 만일 2000년에 일본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도, 투명성 등의 요소가 개선됨에 따라 위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할 경우 1999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총액인 150억달러의 17%~23.6%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5.5억달러~35.3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투자유입 증대효과는 한·일 FTA의 체결이 기존의 투자자유화 조치를 구속화하고 일본 기업들의 對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한·일 FTA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자유화 의지에 대한 역외국 기업의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늘어나게 될 것임. 특히 한·일 FTA의 체결로 일본내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규제적 요소의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 역외국 기업들이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여기에 양국시장의 통합에 따른 동태적인 효율성 제고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FTA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것임.
- 이와 같이, FTA의 체결에 따른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한·일 FTA 협정이 단순한 관세장벽 철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상호인증을 비롯한 수입제한적인 국내규제의 개선 등 양국간 무역투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얼마나 포괄적인 FTA 협정을 맺느냐에 달려있음.

## 나. 생산성 증대에 따른 동태적 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는 ① 규모의 경제효과, ② 경쟁의 심화에 의한 효율성증대 효과 및 ③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예로서, 투자)으로 인한 효과 등이 대표적임.
-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역내국간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동태적 효과 가운데 상대적으로 명확한 연결고리는 산출규모의 확대와 총요소생산성증가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임. 이는 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증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됨.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증가는 산출규모의 확대와 생산요소가운데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자본스톡의 빠른 증가 즉 투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
  - 여기에서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일본과 제3국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문간 자원의 재배치를 통한 산출구성의 변화와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추산해보려 함.
- 직접투자의 증가가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제조업부문에 자원을 재배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이와 함께 해외로부터 유입이 증가된 직접투자가 경공업부문과 중화학공업간에 자원재배치되는 경우도 검토해봄.
  - 직접투자의 증가는 산출규모를 확대하고, 증대된 산출규모는 다시 규모의 경제이익에 따른 생산성을 증대시킴.
  - 이러한 직접투자와 생산성의 관계를 직접투자의 규모와 배분방식에 따라 추

계해 보면 <표-14>와 같음.

<표-14 > 직접투자의 총요소생산성 효과

(단위: %)

분배방식	직접투자 증가 규모		
	30억 달러	20억 달러	10억 달러
농림어업 및 제조업	0.85	0.57	0.28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0.98	0.65	0.32

주: 예로서 30억달러의 직접투자는 환율을 1,100원/달러 적용시 1996년 제조업 자본스톡의 1.41%, 중화학산업 자본스톡의 1.83%에 해당됨.

-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각 부문에서 자본-노동의 요소집약도의 불변,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및 재화의 공급측면만을 고려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따라서, 한·일 FTA에 따른 직접투자 예상증가 규모인 평균 30억 달러를 감안하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이 주로 중화학공업부문에서 크게 활성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제조업 또는 중화학공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0.85% 및 0.98%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따라 한국 중화학산업의 생산성이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한·일 FTA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기로 함. 이는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기업의 생산성이 일본기업 생산성에 비해 10년간 10%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1%의 생산성 증가 추정치를 사용한 동태적 효과는 정태적 분석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정태적 분석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큰 쪽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던 의류와 피혁가공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수송기계,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의 생산규모가 5~13%의 큰 쪽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이 분야의 생산성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 FTA 체결의 전체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합친 것으로, 양국간 FTA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와 경공업과 1차산업의 생산위축으로 요약될 수 있음.

<표-15> 한-일 FTA의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단위: %포인트)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전체효과
농업	0.15	-0.21	-0.06
가공식품	1.05	0.19	1.24
임업	0.02	0.15	0.17
수산업	0.24	-0.01	0.23
광물자원	-0.30	-0.34	-0.64
비철금속	-0.93	0.67	-0.26
음료·담배	-2.38	0.91	-1.47
섬유	0.69	-3.26	-2.57
의류	8.75	-4.16	4.59
피혁제품	9.56	-7.20	2.36
목재·펄프	-0.30	0.71	0.41
종이·인쇄	-0.49	0.13	-0.36
화학	-0.79	2.68	1.89
철강	-1.80	6.91	5.11
금속제품	-1.14	4.99	3.85
자동차	0.68	6.63	7.31
기타수송장비	-1.31	14.67	13.36
전기·전자	-0.65	6.90	6.25
기계장비	-1.65	8.23	6.58
기타제조업	-1.86	-3.98	-5.84

주: 수량기준임.

- 한편, 생산성 증가로 인한 대일본 수출패턴은 관세철폐시의 대일본 수출패턴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나타났음. 즉, 중화학공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들 산업의 대일본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다른 산업의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o 관세철폐시 대일본 수출증가의 절반을 차지하던 의류와 피혁가공산업의 대일본 수출은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표-16> 한·일 FTA의 대일본 수출 및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달러)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대세계 무역수지 효과(1+2)
	대일본 수출	대일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1)	대일본 수출	대일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2)	
농업	62.41	49.07	-137.39	-33.70	-34.98	-228.05	-365.44
가공식품	854.61	764.78	624.62	-96.90	-98.21	-207.00	417.62
임업	-0.02	-0.14	-0.45	-0.04	-0.07	-16.10	-16.55
수산업	30.18	19.02	7.67	-8.03	-8.92	-36.51	-28.84
광물자원	-0.20	-5.82	88.89	-0.99	-1.50	-361.05	-272.16
비철금속	8.82	-228.70	-104.53	-35.55	-102.26	-432.89	-537.42
음료·담배	53.11	-389.29	-232.57	-4.35	-13.53	-47.33	-279.90
섬유	73.66	-193.25	-359.15	-26.62	-18.83	-495.24	-854.39
의류	1,006.95	961.63	940.03	-170.91	-173.93	-536.43	403.60
피혁제품	732.88	695.41	535.62	-84.37	-84.20	-420.55	115.07
목재·펄프	-2.71	-28.30	-29.61	-10.49	-12.49	-99.32	-128.93
종이·인쇄	0.03	-50.15	-62.57	-4.93	-13.55	-196.87	-259.44
화학	91.15	-1,047.62	-469.98	78.86	39.27	424.36	-45.61
철강	166.49	-880.79	-221.01	136.15	30.29	60.45	-160.57
금속제품	0.66	-173.18	-125.48	40.19	38.30	263.99	138.51
자동차	11.89	-524.73	-11.93	8.83	11.53	1,093.38	1,081.46
기타수송장비	8.74	-235.81	-178.06	17.74	26.45	1,267.23	1,089.17
전기·전자	48.76	-481.66	-307.66	108.96	100.13	1,365.60	1,057.94
기계장비	82.89	-4,845.12	-1,180.98	389.18	-49.85	2,055.98	875.00
기타제조업	1.20	-231.11	-235.11	-59.55	-73.45	-439.77	-674.89
서비스	784.80	735.71	-74.17	-	-	-	-74.17
합계	4,016.32	-6,090.05	-1,533.81	243.46	-439.70	3,013.88	1,480.06

주: 1. 수량기준임.

2. 동태적 효과 분석은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계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대일본 수출을 그다지 증가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즉,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본 수출증가는 31.3억달러(서비스 포함시 40.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었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대일본 수출증가는 2.4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대세계 무역수지는 30.1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대일본 무역수지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정하에서도 추가적으로 4.4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경제의 비탄력적인 대일 수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억달러의 추가적 무역적자로 연평균 2.88% 포인트의 추가적 실질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지난 1994~96년의 3년 평균 8%의 GDP 성장률과 함께 대일 무역적자가 연평균 144억 달러로, 단순 계산으로도 동 기간중 1% GDP 증가에 18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가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동태적 생산성 증가로 대일 의존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임.
- 대세계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는 품목은 중화학공업으로서 양국간 관세철폐시 대일본 무역수지 악화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었던 기계류가 생산성 향상 가정하에서는 20.6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전기·전자,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등의 산업도 1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정태 및 동태적 효과를 합한 한국의 대세계 총무역수지는 연간 14.8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 한·일 FTA하에서 양국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한·일 FTA로 우리나라는 연 2.81%의 실질 GDP 증가와 연간 455억달러의 후생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17> 한·일 FTA의 실질 GDP와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

구 분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전체 효과
후생수준(%)	-0.19	11.43	11.24
등가변환(억달러)	-7.66	462.65	454.99
실질 GDP (%)	-0.07	2.88	2.81

주: 등가변환은 후생수준의 변화를 GDP 상당치로 환산한 것임.

- 참고로 FTA하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 1% 가정외에 0.5%와 1.5%의 증가율을 사용하여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표-17>과 같음.

<표-18> 생산성 변동의 실질 GDP 및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

(단위: %억달러)

	생산성 변동 효과			실질 GDP (정태+동태)(%)
	후생수준(%)	등가변환	실질 GDP(%)	
0.5% 증가	5.74	232.57	0.96	0.89
1.0% 증가	11.43	462.65	2.88	2.81
1.5% 증가	17.04	690.07	5.76	5.69

## IV. 한·일 FTA의 정책방향

### 1. 한국의 기본입장

- 관세철폐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일 FTA는 한국의 제조업, 특히 중화학 공업에 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o 관세철폐가 한국제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상품부문에 있어서는 비관 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가 한일 FTA의 한국측 관심부문이 될 수밖에 없음.
  - o 상품분야의 관세철폐가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서비 스, 투자 등이 한국측의 또다른 관심분야가 될 것임.
- 특히 직접투자는 무역과 상호 보완되어 한일 FTA의 혜택을 배가시킬 뿐만 아 니라 한일 FTA로 한국의 중화학산업이 받는 타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보완수단일 것임.
- 한일 FTA는 전통적(traditional) FTA 형태가 아닌 “포괄적(comprehensive) FTA” 형태로 추진해야할 것임. 포괄적 FTA는 한일간의 경쟁적인 비교우위구 조에서 경쟁과 동시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場을 제공할 수도 있음.
- 과거 전통적인 FTA의 경우에는 FTA(즉, 농산물 및 공산품 관세철폐 및 한정 된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또는 철폐)의 효과를 得 또는 失로 평가할 수 있 었으나 포괄적인 FTA하에서는 절대적인 득실을 평가하기 어려움.
  - o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FTA하에서는 한 국가의 득실문제가 아니고 “양국 이 어떻게 상호이익을 균형시키고 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하는 ‘Win-Win’ 방식에 따른 FTA 내용을 설계(Design)하는 문제가 관건임.

## 2. 한·일 FTA의 혜택강화 방안

### 가. 산업·기술협력 강화

- 한일간의 “경쟁적 비교우위분야” — 즉, 양국기업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자동차, 수송기계, 전기·전자, 일부 기계산업 등 — 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메카니즘 개발이 매우 중요함.
  - 협력분야의 선정원칙으로는 FTA의 동태적 이득이 최대화되도록 ① 양국간 산업내 교역(공정분업 또는 수평적 분업) 가능성이 크고 ② 규모의 경제이익이 크며 ③ 무역에 동반되는 투자가 큰 산업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FTA의 동태적 이득은 규모의 경제이익,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증대, 투자증가가 3대 요소로서 특히 경쟁심화가 生存을 건 競爭으로 발전하지 않고 共生의 協力체제로 유도되도록 양국기업간의 산업내 교역의 여지가 충분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분야로서 앞서 지적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수송기계, 공작기계 등에서 양국기업간의 협력체제를 발굴해냄으로서 한일 FTA의 동태적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일 공동의 민간주도형 産業技術協力委員會(ITCC: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특히 양국간의 경쟁적 비교우위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과잉투자조정, 기술제휴 및 이전촉진, 중소기업협력, 공정분업 및 상품차별화 등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내교역을 촉진함이 효과적임. 미국과 EU 사이의 TABD(Trans Atlantic Business Dialogue)가 한 예로서 주요산업별로 WTO Plus 분야의 협력메카니즘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현재 한일간의 협력은 산업이 성숙단계에 있으면서 시장규모가 거대하거나(석유화학), 기술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간 기술격차가 현저한 산업(정밀화학)에만 형성되고 있음.

## 나. 투자확대

-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는 역내외국을 막론하고 촉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FTA→역내무역장벽철폐→역내기업활동 비용저감→기업이익 창출기회확대→역내투자확대」의 과정이나 「FTA→역내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향상→역외기업들의 역내생산거점 확대→역외투자확대」의 논리를 따르는 것임.
- 한일 FTA는 한일간의 투자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한일 FTA시 관세철폐 만으로도 對韓 무역흑자가 약 61억달러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해서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o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ITCC와 함께 별도의 기구로 한일공동의 투자개발은행 (IDB: Investment Development Bank)이 필요할 것임. 동 기구는 특히 양국간의 경쟁적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양국공동의 투자체제를 구축하여 ITCC와 함께 한일간의 산업내교역을 확대하여 FTA의 동태적 혜택을 추구함.

## 다. 경쟁정책의 조화 및 적용강화

- 한일 양국은 모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invisible NTBs)”이 상당수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재벌이나 계열화 및 하청구조에 따른 국내기업간의 강한 상호연계, 특유의 배타적 상관습, 유통구조의 경직성 등은 잘 알려진 교역장벽임.
-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한·일 FTA에 따른 혜택을 크게 증대시켜 새로운 무역창출(trade creation)의 바탕이 될 것임.
  - o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경쟁정책의 조화와 이의 적용강화를 통해 그러한 장벽들을 크게 완화 또는 철폐시킬 수 있을 것임.
  - o 특히, 한·일 FTA를 통하여 不公正거래에 대한 양국간의 공동 규제 강화로 역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라. 양국간 무역수지균형을 위한 조치

- 以上の 산업기술협력 강화 및 일본의 對韓 투자확대 이외에도, 단계별 관세인하(STR: stepwise tariff reduction) 체제를 도입하거나, 한국의 對日수출이 비교우위에 비해 예상외로 저조한 산업에 대한 선별적 개방확대 요구도 가능할 것임.
  - o STR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경쟁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먼저 관세를 인하를 하고 이후에 한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단계식 관세인하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 o 한국의 산업중에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일본시장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들에 대해 선별적 시장개방확대 요구가 가능할 것임(예로서,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수송기계 등).

## 마. 생산요소의 이동 원활화

- 한일 FTA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은 한일 FTA에 따른 서비스교역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임.
  - o 자본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기업설립권 또는 상업적 주재를 보장하여 서비스교역을 활성화함.
  - o 노동인력의 국경간 이동은 서비스제공자의 국경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비스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함. 특히, 노동인력의 국경간 이동은 양국간의 인적교류를 가속화함으로써 양국간의 문화시장개방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약 20년 정도 앞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어 향후 개방적 이민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일 FTA에 따른 노동인

력의 국경간 이동 자유화는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할 것임.

## 바. 무역원활화로 상호이익 확대

- 원산지규정: 양국간 특혜원산지 규정 필요
- 통관절차: 양국간 EDI연계 등 무역원활화
- 정부조달: 공공건설공사(지방정부 포함) 참여폭 확대, 참여기준 완화
- 反덤핑: 조치적용전 협의기회
- 긴급수입제한조치: 과도기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억제
- 지적재산권: 공동등록 가능성 검토
- 표준·인증: MRA (기술표준 뿐만 아니라 SPS를 대상으로)
- 전자상거래(e-Commerce): 네트워크 통합 및 상호 연결체제 확립

##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 한·일 FTA는 21세기 양국간의 뉴파트너쉽 정신과 행동계획에 입각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o 지금까지의 한·일 경제관계는 수직적 분업, 과도한 경쟁과 미흡한 협력, 상호불신에 의해서 특징지어져 왔는바, 21세기에는 수평적 분업, 경쟁과 협력의 병행에 의한 상호이익과 공생, 신뢰구축을 달성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번영은 물론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 번영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해야 함.
- 한·일 FTA는 단기적, 정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동태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지만 장기동태효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한·일 FTA의 추진동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됨.
  - o 장기 동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규제완화, 투명한 지배구조 등 내부개혁에 정책공조를 긴밀히 해야하며, 양국간의 투자협력, 산업기술



협력, 인적교류확대를 위한 정책공조도 강화되어야 함.

- 한·일 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 한·일 투자개발은행(IDB)설치 등은 정책 공조의 구체적 예가 될 것임.
- 한·일 FTA가 충분한 교역 및 투자증대, 경쟁촉진과 생산성향상 효과를 가져 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제거를 통한 시장접근 뿐만 아니라 투자, 상호인증,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로써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한·일 FTA는 양국내에서는 물론 양국간에 기업 및 연구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양국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함.